

(미래정책연구실, 2009.12.14)

□ 개회 배경

- CO₂ 등 온실가스 배출이 증가하여 전 세계적으로 기후변화와 온난화 문제 대두
 - 온실가스 배출증가와 이로 인한 기후변화는 유엔이 정한 제1의 과제이며, 향후 20~30년 안에 인류가 풀어야 할 과제
 - 2012년에 종료되는 교토의정서를 대체할 새 기후협약 마련의 필요성 제기
- 세계가 기후변화와 이로 인한 사회·산업구조적 변화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기 시작했으며, 각국 정치 지도자들 역시 이를 최우선 과제로 여기기 시작함.

□ 회의 개요

코펜하겐 기후변화회의의 주요 일정

일시	일정
12.07	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(COP ¹⁾) 개막
12.08	협약이행자문부속기구(SBI ²⁾) 등 회의 개막
12.09	CMP ³⁾ 회의(청정기술, 교토의정서 수정등 논의)
12.10~11	UNFCCC 산하 기구들 비공식 회의
12.12	COP·CMP 총회, SBI, SBSTA ⁴⁾ 폐회
12.14~15	비공식 그룹 회의
12.16~17	COP·CMP 고위급 회의, 국가별 입장발표
12.18	UNFCCC 국가간 기구들 성명발표, COP·CMP합동 총회 뒤 폐막

주: 1) COP(Conference Of the Parties: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), 2) SBI(Subsidiary Body for Implementation: 이행자문 부속기구), 3) CMP(Conference of the Parties/Meeting of Parties), 4) SBSTA(Subsidiary Body for Scientific and Technological Advice: 과학기술자문 부속기구).

자료: UNFCCC 홈페이지.

- 12.07일부터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제15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(COP15)를 개최로 12월 18일까지 회의 진행

- 2주간 계속될 이번 회의에는 세계 105개국 정상과 192개국 대표 등 약 2만 명이 참여
- 105개국은 전세계 인구의 82%, 전 세계 생산(GDP)의 89%, 온실가스 배출량의 80%를 차지

코펜하겐 합의서 초안

작성시기	2009년 11월 27일
작성주체	영국, 미국, 덴마크 / 일부 국가에 노출
주요내용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모든 국가는 2020년 이내 가능한 빨리 온실가스 배출량 최고치를 설정하는데 동의 - 모든 국가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2050년까지 1990년 대비 최소 50% 감축하는데 동의 - 2050년까지 개발도상국 1인당 온실가스 배출량 허용치 최대 1.44톤, 선진국은 1인당 2.67톤 - 기후변화 적응 위해 재정지원은 범주를 나눠 최대 취약국에 우선 배정 - 기후변화 재정 관리 주체는 World Bank로 하되, 유엔의 역할 약화

자료: 일간 가디언(영국).

□ 주요논의 사항

* 주요논의사항은 주로 조선일보 보도자료 내용임 (2009.12.07).

- 회의의 핵심안건은 ‘기후변화 대응체제에 들어가는 돈을 누가 얼마나 낼 것인가’하는 것임.
 - 이른바 ‘적응비용’이라 불리는 저탄소 경제체제로의 전환비용이 최대이슈
 - 국제에너지기구(IEA)는 2030년까지 기후변화 대응에 들어가는 시설 전환비용은 총 10조 달러가 넘을 것으로 전망
 - 코펜하겐 합의가 실패할 경우 피해액은 매년 최소 5,00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며, 대부분 저위도 지역에 흩어져 있는 개도국·최빈국들이 감당해야 함.
- 탄소감축 목표 설정에 있어서 유엔 정부간 기후변화위원회(IPCC)는 탄소감축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2020년에 정점을 찍고 이후 탄소배출 총량이 줄어드는 경우에만 과국을 막을 수 있다고 전망

- 이에 미국, EU 등 선진국들은 일단 구체적 목표치를 제시했지만, 중국·인도·브라질·남아공 등 주요 개도국은 절대량 감축보다 GDP 단위당 탄소배출량을 의미하는 '탄소강도(carbon intensity)' 목표를 선호
- 즉, 주요 개도국은 경제성장에 따라 배출되는 탄소의 절대량은 줄이지 않고 성장에 필요한 에너지를 보다 효율적으로 쓰겠다는 입장

주요국 탄소배출 및 감축목표

	GDP(달러)	2020년 감축목표	탄소배출총량(전 세계 비중)
중국	4조 3,000억	40~50%(탄소강도)	81억 톤 (20.7)
미국	14조 2,000억	약 4%(배출총량)	61억 톤 (15.5)
EU	18조 3,000억	20~30%(배출총량)	46억 톤 (11.8)
인도	1조 2,000억	20~25%(탄소강도)	20억 톤 (5)

주: 탄소강도(GDP단위당 탄소배출량)은 2005년 기준, 탄소배출량은 1990년 기준임.

자료: 포츠당 기후변화연구소, 세계은행(World Bank).

○ 기후변화협약의 구속력에 대한 합의점을 도출해야

- 1997년 체결된 교토의정서는 선진국에 탄소 감축목표 달성을 의무화해 차별 규정을 두었지만, 개도국에는 탄소 감축을 유도할 인센티브를 주는 구조였음.
- 현 상황에서 유럽은 여전히 차별 규정을 원하지만, 미국·중국·인도 등은 감축노력 결과를 보고하고 검증받는 형태가 돼야 한다고 주장